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1 2022
Vol. 61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January, 2022

VOL. 61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261

제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04

재정 INSIGHT

04

KPFIS 인사이트

- 2022년 예산과 주요 내용
-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2

재정칼럼

- 2022년 예산 관리의 전망과 과제
-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 공공정보시스템의 비전과 전략
- 윤성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20

재정 NOW

- 2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26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
- 30 키워드 재정
 골목상권
- 34 해외재정동향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전망



42

재정 STORY

- 42 이달의 재정 이야기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6 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
 '어떻게', '왜' 다른가?
- 52 재정사상의 변천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 재정사상
- 58 재정 캘린더
- 60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63 애독자 코너

2022년 예산과 주요 내용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sokim@kpfis.or.kr)

2022년도 예산이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월 1일부로 집행에 들어갔다. 올 한 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며, 재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2년 우리나라 경제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재정총량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2022년 경제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세계은행(World Bank)은 1월 11일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21년 5.5% 대비 1.4%p 하락한 4.1%로 전망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는 2022년과 2023년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4.5%,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세 둔화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20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2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표 1〉 OECD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전망시점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2021.9	2021.12	조정폭	2021.9	2021.12	조정폭	
전 세계	-3.4	5.7	5.6	-0.1	4.5	4.5	0.0	3.2
G20	-3.1	6.1	5.9	-0.2	4.8	4.7	-0.1	3.3
한국	-0.9	4.0	4.0	0.0	2.9	3.0	0.1	2.7
독일	-4.9	2.9	2.9	0.0	4.6	4.1	-0.5	2.4
일본	-4.6	2.5	1.8	-0.7	2.1	3.4	1.3	1.1
영국	-9.7	6.7	6.9	0.2	5.2	4.7	-0.5	2.1
미국	-3.4	6.0	5.6	-0.4	3.9	3.7	-0.2	2.4
중국	2.3	8.5	8.1	-0.4	5.8	5.1	-0.7	5.1

자료: 기획재정부. (2021.1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보도자료

이런 세계경제전망 속에서 2022년 우리나라 중앙정부 규모는 607.7조원으로 작년에 이어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3조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전년 대비 8.9%가 증가한 규모이다. 늘어나는 정부지출 규모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상 및 경제·사회 구조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22년은 문제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 해로 한국판 뉴딜정책 등 그간 추진 해온 정책을 완결하고 코로나19 시대 이후 앞서나가기 위한 디지털·탄소제로 경제로 이행에 필요한 선도적 투자를 본격화하는 데에 재정운용의 의미를 담았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총량을 관리하고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2022년 재정총량

● 재정수입

재정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7%(71.0조원) 증가한 553.6조원 규모이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세수 확보가 용이할 전망이다. 특히, 국세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각각 전년 대비 40.6%, 16.2%, 17.8% 증가하면서 세입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금수입 역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가입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7%(13.1조원) 증가한다. 다만, 벌금, 정부출자수입 등 일부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충분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지만, 올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의 증가는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지며, 사회보장성기여금¹ 증가에 따라 국민 부담률의 크기는 2021년도 26.4%에서 28.6%로 높아지게 된다.

〈표 2〉 2022년 재정수입

(단위: 조원, %)

	2021년		2022년		2021년 본예산 대비		2021년 추경 대비	
	본예산 (A)	2차 추경 (B)	정부안	예산 (C)	증감액 (C-A)	증감률 (C/A)	증감액 (C-B)	증감률 (C/B)
총수입	482.6	514.6	548.8	553.6	71.0	14.7	39.0	7.6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43.4	60.7	21.5	29.1	9.3
법인세	53.3	65.5	73.8	74.9	21.6	40.6	9.4	14.3
부가가치세	66.7	69.3	76.1	77.5	10.8	16.2	8.1	11.7
소득세	89.8	99.5	105.0	105.8	16.0	17.8	6.3	6.4
세외수입	28.9	29.3	26.7	26.1	-2.8	-9.7	-3.2	-10.9
기금수입	171.0	171.0	183.5	184.1	13.1	7.7	13.1	7.7
조세부담률(%)	18.6	20.2	20.7					
국민부담률(%)	26.4	27.9	28.6					

자료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대한민국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607.7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49.7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2017년 403조원으로 400조원 대를 넘은 이후, 2020년 512조원, 2021년 558조원 편성에 이어 슈퍼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예산의 편성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한국판 뉴딜 2.0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소득·고용안전망 확충 등 상생·포용국가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반영되어 정부안 대비 3.3조원이 증액됐는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2010년 이후 작년 2.2조원 증액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출 성격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각각 303.2조원(49.9%), 304.5조원(50.1%) 규모이다. 의무지출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3.9%가 증액됐는데, 이는 기초연금의 인상,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증가하고, 국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이전재원 규모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3〉 2022년 재정지출

(단위: 조원, %)

	2021년		2022년		2021년 본예산 대비		2021년 추경 대비	
	본예산 (A)	2차 추경 (B)	정부안	예산 (C)	증감액 (C-A)	증감률 (C/A)	증감액 (C-B)	증감률 (C/B)
총지출	558.0	604.9	604.4	607.7	49.7	8.9	2.8	0.5
의무지출	266.1	279.1	301.1	303.2	37.1	13.9	24.1	8.6
	(47.7)	(46.1)	(49.8)	(49.9)				
재량지출	291.9	325.8	303.3	304.5	12.6	4.3	-21.3	-6.5
	(52.3)	(53.9)	(50.2)	(5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6대 분야별 재원 배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소득·고용안정망 확충 등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재정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분야가 195.0조원(총지출 대비 3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98.1조원(16.1%), 교육 분야 84.2조원(13.8%), 국방 분야 53.0조원(8.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1.3조원(5.2%)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로 각각 13.4조원(15.5% 증가), 12.9조원(18.2%)이 증액됐다. 이는 국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법정의무지출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².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의 순으로 예산이 증액됐으며, 감액된 분야는 없었다.

1.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을 의미한다.

2.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표 4〉 16대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A)	2차 추경	정부안 (B)	최종 (C)	국회 증감 (C-B)	전년 대비 (C-A)	%
총지출	558.0	604.9	604.4	607.7	3.2	49.7	8.9
일반·지방행정	84.7	99.7	96.8	98.1	1.3	13.4	15.8
공공질서 및 안전	22.3	22.3	22.4	22.3	-0.1	0.0	0.1
통일·외교	5.7	5.7	6.0	6.0	-0.1	0.3	4.4
국방	51.4	50.9	53.7	53.0	-0.7	1.6	3.1
교육	71.2	77.8	83.2	84.2	1.0	12.9	18.2
문화 및 관광	8.5	8.8	8.8	9.1	0.3	0.6	7.3
환경	10.6	10.7	11.9	11.9	0.0	1.3	12.4
사회복지	185.0	189.3	195.5	195.0	-0.5	9.9	5.4
보건	14.7	22.8	21.3	22.7	1.4	8.0	54.5
농림수산	22.7	23.0	23.4	23.7	0.3	1.0	4.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6	40.1	30.4	31.3	1.0	2.7	9.3
교통 및 물류	21.4	21.5	22.4	22.8	0.4	1.4	6.7
통신	8.4	8.5	9.1	9.0	-0.1	0.5	6.5
국토 및 지역개발	5.1	5.1	5.1	5.1	0.0	0.0	0.7
과학기술	9.0	9.0	9.5	9.6	0.0	0.6	6.4
예비비	8.6	9.7	5.0	3.9	-1.1	-4.7	-54.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재정건전성

경기 회복세로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재정지출 규모가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서, 올해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전년도 2차 추경 기준으로 90.3 조원 적자보다는 감소한 54.1조원 적자로 GDP 대비 -2.5% 규모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1,064.4조원으로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08.4조원, 2차 추경 기준으로는 99.1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해 GDP 대비 국 가채무 비중 역시 처음으로 5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속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2020년 9월에 발표했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2년 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4.0%, 50.9%로 전망됐으나, 올해 예 산 편성 결과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2.9%, 50.0%로 축소됐다. 또한 「2021~2025년 국가재 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회복에 따른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지출증가 속도 조절을 통하여 2025년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재정수지는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표 5〉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단위: 조원, %)

	2021년		2022년		2023 ^f	2024 ^f	2025 ^f
	본예산	2차 추경	정부안	최종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482.6	514.6	548.8	553.6	570.2	593.9	618.5
총지출	558.0	604.9	604.4	607.7	634.7	663.2	691.1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75.4 (-3.7)	-90.3 (-4.4)	-55.6 (-2.6)	-54.1 (-2.5)	-64.5 (-2.9)	-69.4 (-3.0)	-72.6 (-3.0)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112.5 (-5.6)	-126.6 (-6.2)	-94.7 (-4.4)	-94.1 (-4.4)	-104.7 (-4.7)	-108.4 (-4.7)	-109.2 (-4.6)
국가채무 (GDP 대비, %)	956.0 (47.3)	965.3 (47.3)	1,068.3 (50.2)	1,064.4 (50.0)	1,175.4 (53.1)	1,291.5 (56.1)	1,408.5 (58.8)

주: 2023~2025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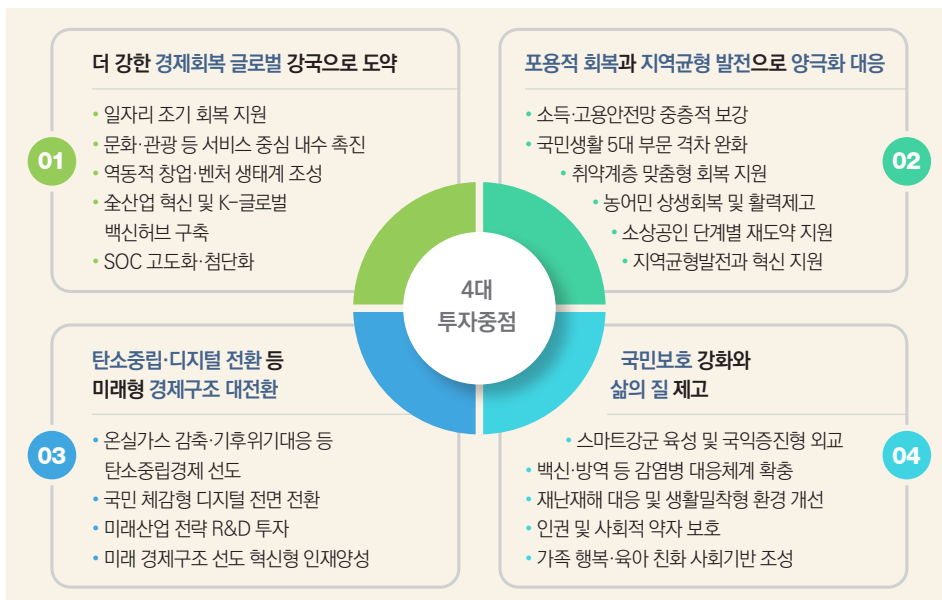
자료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대한민국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년 예산의 주요 내용

2022년 한 해 정부의 재정운용은 “포용적 경제회복·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① 경제회복, ② 민생포용, ③ 미래대비 도약, ④ 국민보호 강화를 등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 4대 투자 방향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22년도 예산의 4대 중점 투자 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2022 예산」 홈페이지(<http://2022예산.kr/>)

첫째,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은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정사업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청년사다리 패키지 사업 등 일자리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비스 중심 내수촉진 등 경제회복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전 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SOC 고도화·첨단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둘째,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소득·고용·의료·돌봄·주거·교육·문화 등 전 부문에 걸쳐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기준중위소득을 5.02% 인상하고,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00% 현실화, △교육활동지원비를 21.1%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10년간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설 등 계층·지역별로 맞춤형 재정사업을 마련하여 상생발전을 지원한다.

셋째, 사람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선제적 전환 추진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0.9조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0.8조원),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0.2조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0.6조원) 등의 사업에 투자한다.

마지막 집중투자 분야는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위해 안전을 보장받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 조성을 위해 투자한다. 외교·안보, 감염병, 재난·산업재해, 생활환경 등에서 국민안전 확보와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가족·육아 친화적 사회 조성 등이 중점으로 추진된다.



3대 재정혁신

정부는 확장적 재정투입을 통해 중점 투자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3대 재정혁신은 △재정지출 재구조화, △협업예산의 고도화, △국민공감예산 확대이다.

첫째,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검토하여, 미래투자재원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금융지원금은 혁신벤처·창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한시적 일자리·생계유지 지원금은 SW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으로 재투자된다.

둘째, 협업예산을 활성화한다. 일부 재정사업은 부처 간 유사·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부처 간 협업·협력이 필요한 핵심 사업군을 중심으로 협업예산 운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R&D, ODA, 생활SOC 등 일부 분야에서 협업 형태로 운용된 것과 같이, 2022년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코로나19 이후 공정한 전환, △미래혁신 산업·인재 육성, △인권보호·국민안전 등 4대 부분을 선정했고 협업을 추진한다.

셋째, 국민공감예산 확대이다.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수요 현장간담회,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분야별·권역별 예산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국민공감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다.

그 외에 재정관리체계 혁신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성과관리의 인프라 확충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의 내실화, 재정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기준인 재정준칙 도입³ 노력을 계속 추진한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2021). 「2022년 예산」.
- 기획재정부. (2021.1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1.12.20.),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 대한민국정부. (2020).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 대한민국정부. (2021).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URL: <https://www.moef.go.k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³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2020년 12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예산 관리의 전망과 과제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2022년 3월 9일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2022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집행을 시작해야 할 단계이지만, 추경을 통해 신임 대통령과 신임 지방정부의 장은 자신의 예산을 다시 만들고자 할 것이다. 당연히 지출 소요의 증대가 예상된다, 정치권은 국민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 극대화 가설

니스카넨(Niskanen) 교수는 예산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극대화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예산이 부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여 증액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의 예산 증가 속도를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011년에 300조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2022년 600조원으로 두 배가 됐다. 이미 의무지출로 경직적인 지출만 300조원 규모다. 공무원 숫자는 같은 속도로 늘지 않는데,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관리하는 사업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부실한 집행이 우려된다.

2020년 결산기준으로 7.1조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3.8조원, 이월액이 1.4조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7조원이다. 1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도 많다. 그런 사업에도 예산은 매년 배정하고 있다. 성과의 관점에서 보면 1,774개 단위사업에 대해 4,733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했는데 달성률은 74.8%에 그친다. 확보한 예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은 '일을 많이 하는 정부'보다는 '일을 잘하는 정부'를 원한다.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의 논의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허하다.

예산실 재구조화 논의의 맥락

향후 정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획과 조정이 될 것이다. 특히 다부처 복합기능의 관리가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2016~2020년) 24개 부처 135개 사업에 230조원이 투입됐다. 각 부처에서 부지런히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체감이 어려운 듯싶다.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7년째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 중의 하나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편성과 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스테이플러 위원회라는 말이 그러한 맥락이다. 각 부처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모아서 문서로 합치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방향성 없이 짜깁기식 예산이 되어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다. 제임스사의 콘텐츠 제작비 지원, 도서관의 미디어창작공간 등의 예산이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업에 포함되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고 부피만 늘리고 있다.

인재 양성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2022년 예산에 8개 부처 16개 사업 4,85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비전을 읽을 수가 없다. 기재부,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으나, 조정할 시스템이 부재한다.

이에 차기 정부의 과제로 종합 기획과 조정 기능 강화를 모색하는 와중에 예산실의 재구조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실이 각 부처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어 전체를 조감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논거이다. 이럴 경우 예산은 관료적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이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대응성이라는 명분하에 선심성이 스며들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편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는 있다. 예컨대 학자들은 향후 재정 개혁의 우선순위로 국고보조금의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관료적 접근으로는 개혁이 어렵다. 따라서 강화된 정치력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와 교육부의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예산실 재구조화 논의는 정부 기능의 재구조화 논의의 연장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기획과 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세부 사업 단위는 개별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시도하다가 정착되지 못한 총액배분 자율편성이라는 Top Down 방식을 다시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산에 반영시키는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실, 각 부처,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재편성하는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포용적 재정투자와 선제적 재정투자

국민경제와의 관계에서 보면 재정은 종속변수이기도 하지만 독립변수이기도 하다. 재정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 징수되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속변수이지만, 재정 지출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독립변수이다. 향후 국민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재정은 포용적 기능과 선제적 기능의 두 가지 축으로 관리될 것이다.

재정은 우선 일자리 확충, 복지 확충 등 복지 사업의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소득과 재산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과도 조율돼야 한다.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이 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출도 중요하다.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구조 재편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수소경제로의 전환 속도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치 경제사회의 재구조화 과정에 관료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재정 관리의 쟁점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 간

의 관계에서 역할 재조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100만 농가에 연간 20조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농가부채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 사례로 회자되기도 한다. 재정의 한계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재정이 미처 충분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개입하게 되어 잘못된 방향을 설정할 것이 우려된다. 자칫 공권력으로 '탈선한 기차에 속도를 재촉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영구 위조점의 관리

식물관리에는 '위조점'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게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자생력으로 버틴다. 그러다가 다시 물을 주면 살아난다. 문제는 영구 위조점을 지나게 되면 물을 주어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경제와 재정도 마찬가지이다. 자생력으로 버티는 기간을 관리하면서 영구 위조점을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의 팽창 속도 못지않게 채무관리도 중요하다. 2019년 국가채무 723.2조원, 2020년 846.6조원, 2021년 965.3조원에서 2022년 1,064.4조원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다. 그리고 202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50%가 된다.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7.3%를 유지하다가 50%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2020년에는 관리재정수지가 112조원의 적자를 실현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공권력을 바탕으로 과세권과 국채발행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 명든다. 국민경제를 자양분으로 삼아 정치권이 과욕을 부리고 관료가 영역 쟁탈전(Empire Building)을 벌이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귀착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할 이유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재정 관리 지표를 설계하여 영구 위조점을 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어야 한다.

설혹 그것이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되더라도 전문가들은 무엇인가 외쳐야 한다. 그 외침은 국민 경제의 비전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민을 위한 미래의 관점이어야 한다.



공공정보시스템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profyoon@korea.ac.kr)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가 소중한 자산이다

얼마 전 의료정보를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의료정보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각종 정보를 사고파는 시대에 진입했다.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좋은 데이터가 많아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다.

인공지능 수준은 미국이 세계 1위이고 중국이 세계 2위이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1위 인공지능 국가인 미국을 능가한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사람을 구별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해도 사람을 구별하기에 안면인식으로 대중교통의 차표검사를 대신한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전한 가장 큰 이유는 방대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10억이 넘기에 안면인식에 관한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권위주의 국가인지라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안면인식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데이터가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기업과 달리 필요할 경우 데이터 생산과 수집을 강제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고객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산으로 활용한다. ‘구글은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구글에 검색할 때 입력한 데이터는 구글의 가장 큰 자산이다.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을 사용하다보면 구글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메일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에 관련된 광고가 화면에 노출된다. 섬찝해지는 순간이다.

민간기업이 수집한 정보가 과연 그 기업만이 독점할 수 있는 정보인지는 곰곰 생각해보아야 한다.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고객이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정보를 공짜로 그것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국가가 개입하여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익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민간기업에만 맡겨 놓을 경우 개인정보의 남용위험이 더 클 수 있다. 만약 금지해야 할 정보라면 기업에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기업에 허용한다면 한 기업만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취합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민간부문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모든 공공부문의 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앙 부처의 업무에 관련되는 정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타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련되는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공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민간부문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민간기업과 정부가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도 절실하다. 국가에 필요하지만 공공부문, 민간부문 어디에서도 생산되지 않은 정보는 정부가 생산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는 국립도서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취합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이익이다.

재정정보는 정보 관리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

바야흐로 AI의 시대이다.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공공정보시스템은 AI에 기반한 정보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공공정보시스템의 비전은 결국 민간부문의 정보까지 관리하는 총체적 정보시스템으로 도약해야 한다. 어디선가는 대한민국의 데이터 관리를 총체적 시각에서 고민해야 하며 민간이 담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기업보다 정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기 쉽지만 신뢰도에 있어서는 기업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언론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민간기업에서 당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 언론의 통제는 물론이고 감사원과 온갖 시어머니의 등쌀에 움작달 짝하지 못하는 정부조직이 담당해야 안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회사원보다 공무원과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낀다. 대한민국은 관주도의 성장정책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관주도의 관치경제가 지금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다보니 관주도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통합정보시스템은 민간에게 맡길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정보는 공공부문 정보 중 가장 방대한 정보이며 수치로 표현되는 객관적 정보다. 조직에 관한 수많은 정보 중 상당수는 홍보성 정보이며 주관적 정보이지만 재정정보는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조직의 행위를 낱알이 드러내는 정보이다. 예산과 회계를 거치지 않고 조직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분석하면 조직의 정책과 관리가 보인다.

재정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연계된다. 봉급과 각종 수당에 관련된 재정정보를 인사정보와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인사정보와 재정정보가 결합되면 담당자의 소관업무에 관한 정보가 통합되기 쉽고 인사와 재정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기업의 정보시스템의 발전에 회계시스템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재정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에 각종 정보가 추가되는 대안이 다른 정보시스템에 재정정보원의 데이터가 추가되는 대안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재정정보원은 공공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가장 적절한 정부기관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2019년부터 KODAS(데이터분석), KOFIS(재정통계서비스), KORAHIS(정책상황관리시스템)의 3개 시스템을 중심으로 재구축되어 드디어 2022년에 출범한다. 재정정보원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AI기반 공공정보시스템(AIPDS: AI based Public Data System)이란 2022년 출범한 3개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통합시스템의 모델이다. 2022년이야 말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공부문 AI의 기초가 탄생한 원년이다. AIPDS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매순간 똑똑해지는 학습기계이고 정책을 분석평가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인공지능이다.

AI 기반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읽으면 독재사회의 위험에 대해 실감할 수 있다. 만약 빅브라더 같은 독재자의 손에 AI 기반 공공정보시스템이 들어간다면 독재를 무너뜨릴 기회조차 사라진다. 하지만 독재가 두렵다고 통합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포기한다면 중국과 같은 AI 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보면 위험 회피 전략으로 소극적 행보를 했던 나라와 집단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갔던 나라와 집단에게 종속됐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구글이나 중국의 바이두, 텐센트 같은 거대 IT 기업에 기술적으로 종속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민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지 않으면 AI 시대에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 후발주자로서 앞선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구글이 되는 전략이다. AI 기반 공공정보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총체적 정보시스템으로 민간부문의 정보까지 관리하는 민관합동조직으로 진화해야 한다. 총체적 정보시스템은 정부의 독점물이 아니고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정보요구를 반영하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국민이 민주주의 정부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똑똑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등잔 밑에서 추진되고 있는 AI 기반 공공정보시스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정보원은 AI 시대에 정부의 등잔 밑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AI를 육성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민간 부문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장 거시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항목이 누락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구글이 되겠다는 의지로 데이터와 AI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정보시스템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개인의 정보보호와 국가권력의 정보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감시와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핵심이다.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생명이나 다름없다. 오래 전에 정부가 모든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압초에 걸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무산된 사례가 있다. 당시의 사건을 교훈 삼아 공공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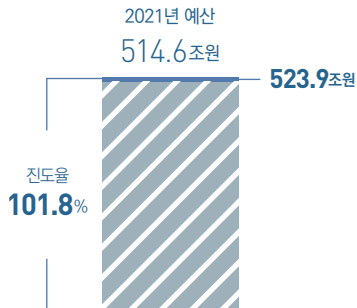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우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2021년 1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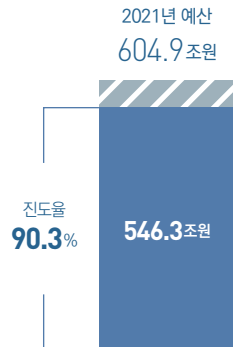
총수입 **523.9**조원

(누적 기준)



총지출 **546.3**조원

(누적 기준)



*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22.4조원 적자

(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3.0

조원

관리재정수지

77.0조원 적자

(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9.4

조원

국가채무

944.6조원

(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전월 대비

+5.0

조원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2.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총 수입

• 2021년 11월 말 기준

총수입
523.9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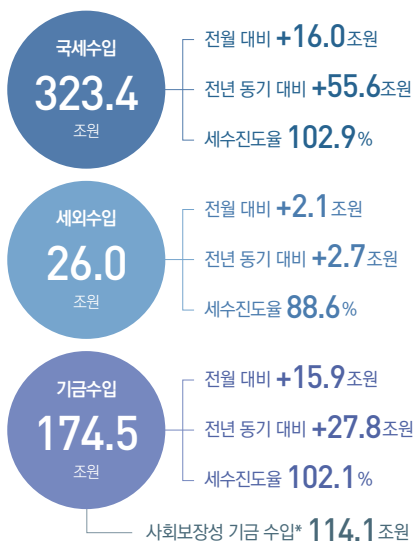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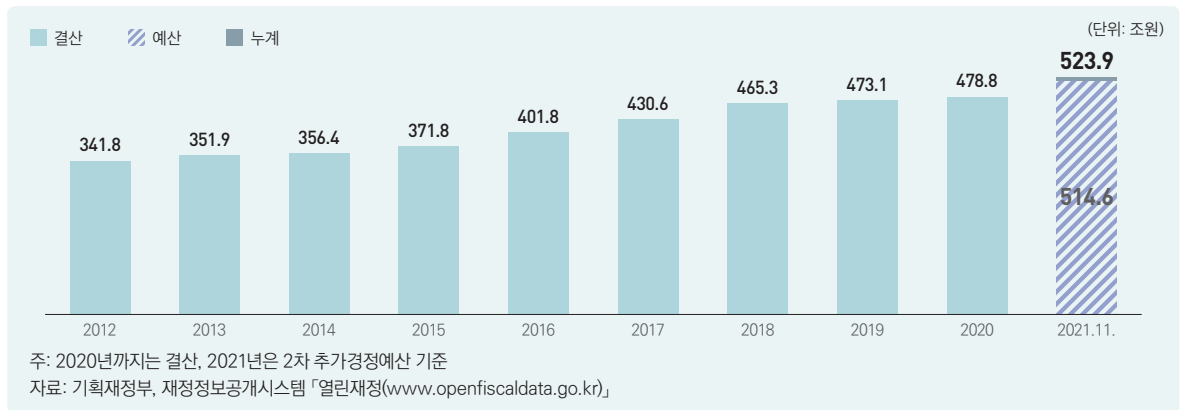
전월 대비
+34.0조원

전년 동기 대비
+86.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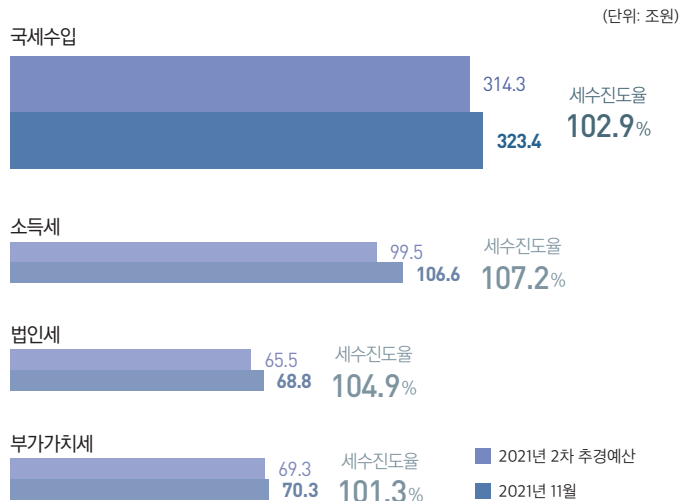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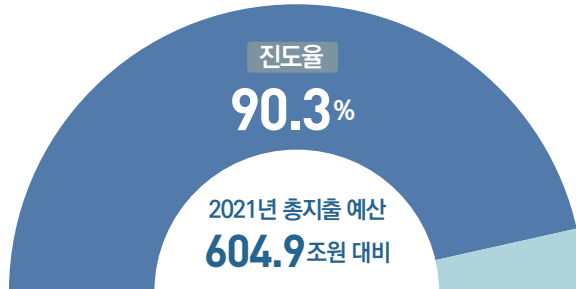


주: 세수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총 지출

• 2021년 11월 말 기준

총지출
546.3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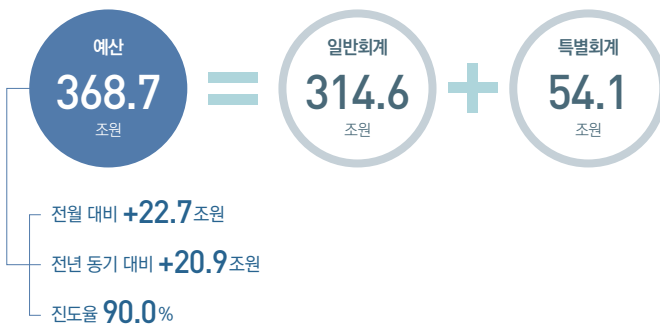
전월 대비
+37.1조원

전년 동기 대비
+45.2조원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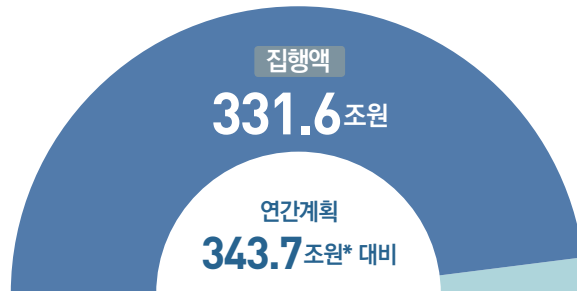
2)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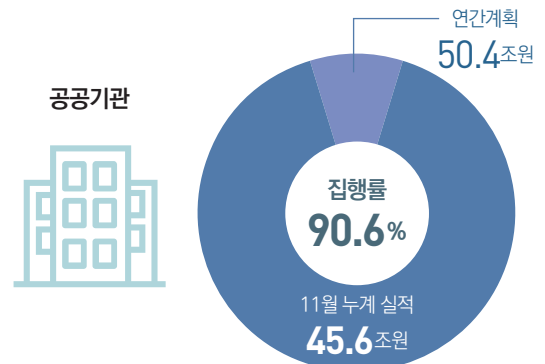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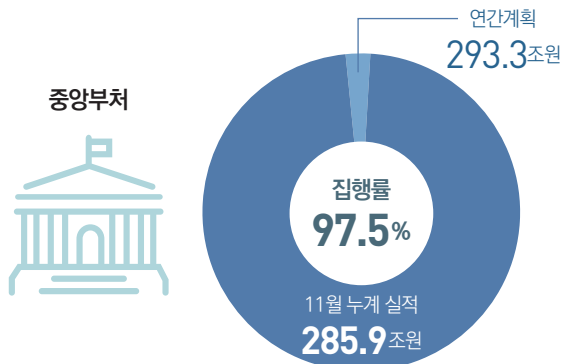
전월 집행액 대비

+19.4조원

전월 연간계획 대비

+5.7%p

* 2020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정(341.8조원→343.7조원)



(단위: 조원, %)

집행률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부처명	11월 실적	집행률
①	중소벤처기업부	22.7	157.1
②	고용노동부	7.6	114.7
③	교육부	61.6	99.8
④	행정안전부	48.9	99.7
⑤	보건복지부	29.0	98.2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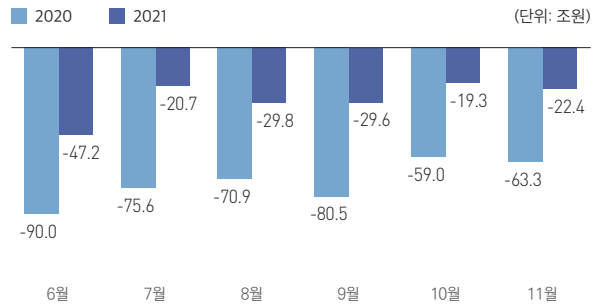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go.kr)」

재정수지

• 2021년 1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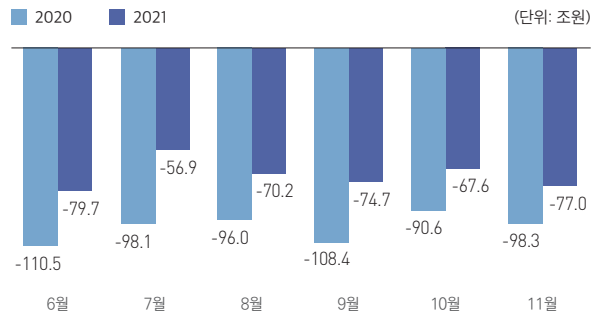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22.4조원
적자

전월 대비
-3.0조원
전년 동기 대비
+40.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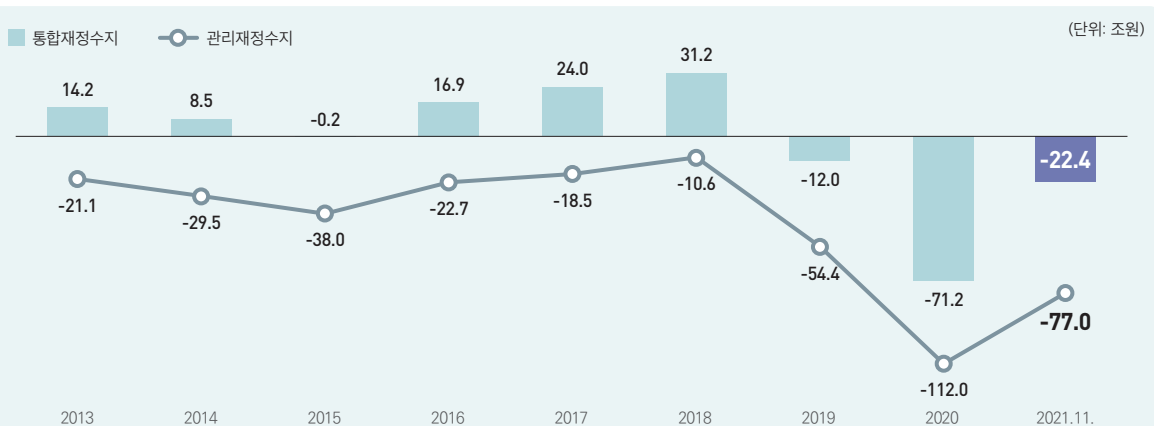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77.0조원
적자

전월 대비
-9.4조원
전년 동기 대비
+21.3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6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0년까지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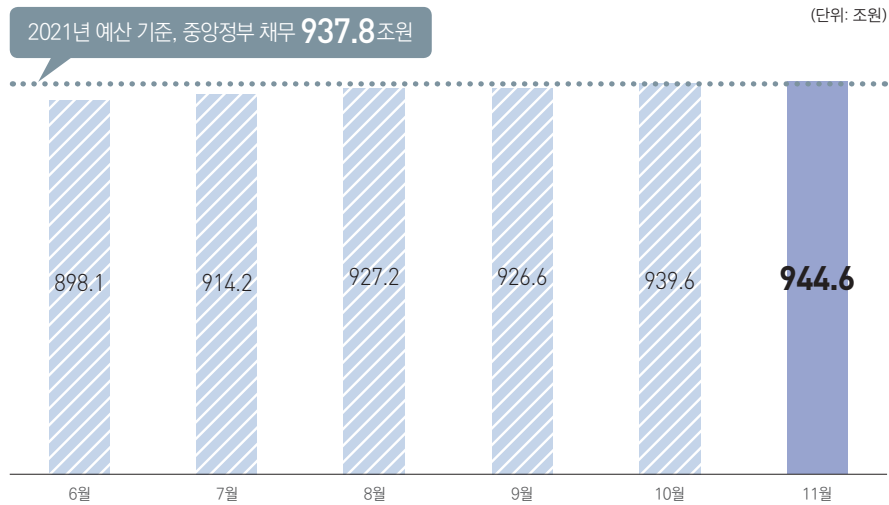
국가채무

• 2021년 1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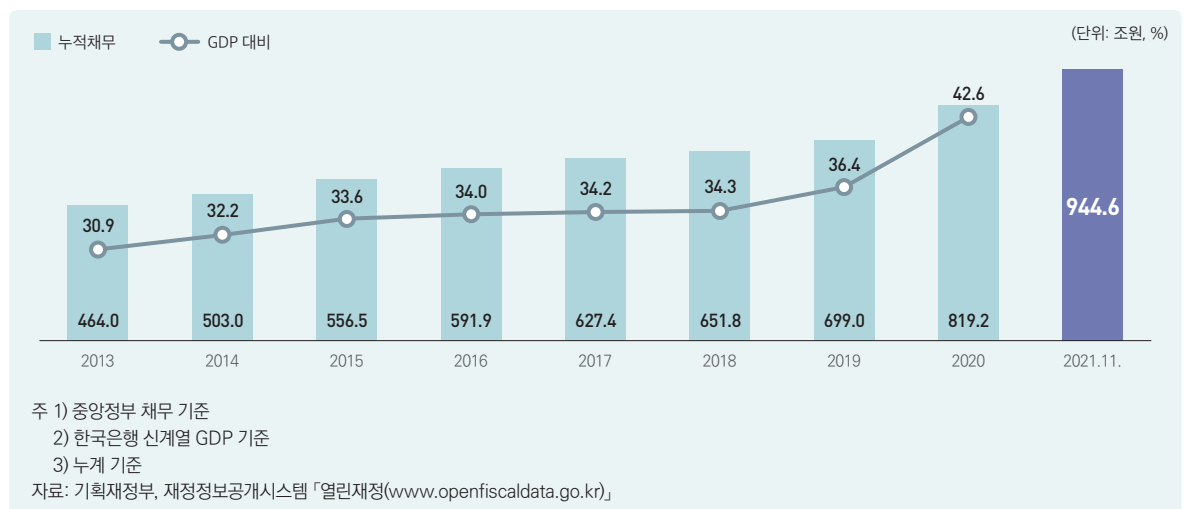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944.6
조원

전월 대비
+5.0조원

전년 대비
+125.4조원



주: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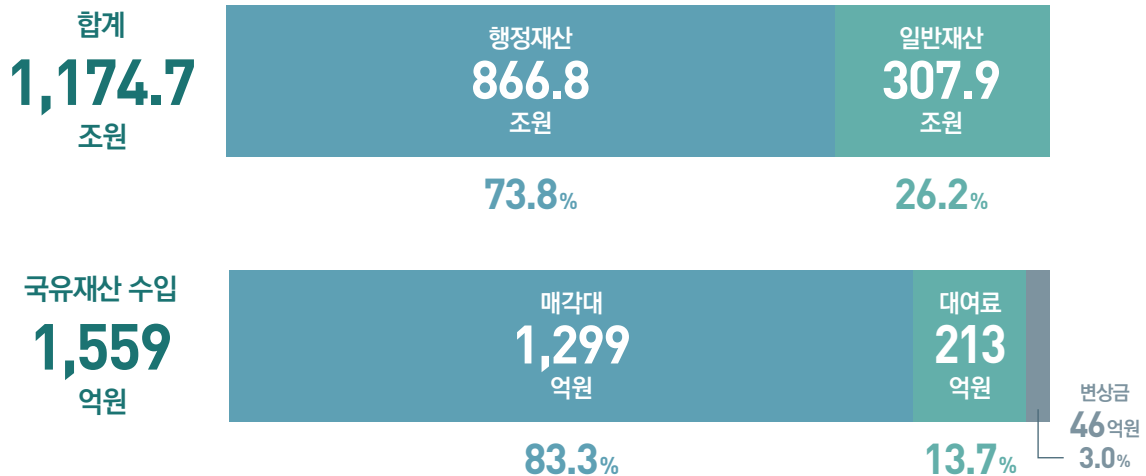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

우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 2021년 11월 말 기준



*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은 기획재정부 「월간재정 동향 및 이슈」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정보는 e나라재산 「국유재산 포털」(www.k-p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 유 재 산

• 2021년 11월 말 기준

국유재산
1,174.7
조원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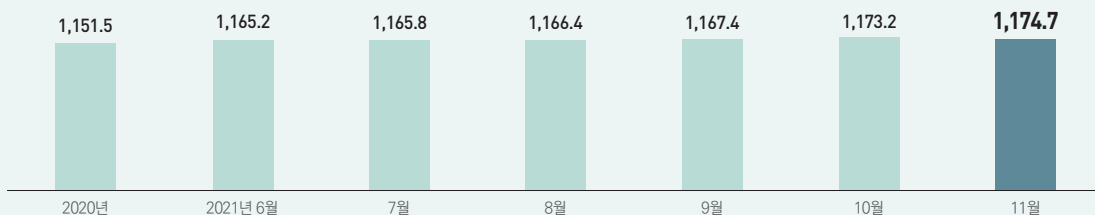
+1.5조원

전년 대비

+23.2조원

*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

(단위: 조원)



주: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21년 자료는 잠정

행정재산
866.8
조원



73.8%



26.2%

일반재산
307.9
조원

* 국가의 공공재산(청사, 관사),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공원), 기업용재산(정부기업 재산), 보존용재산(문화재 등)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단위: 조원, 잠정)

행정재산	구분	일반재산
491.5	토지	31.9
75.0	건물	2.0
289.2	공작물	0.1
0.9	기계기구	-
5.5	입목죽	2.2
3.0	선박·항공기	-
-	유가증권	271.6
1.6	무체재산	-

주 1) 공작물: 국유지 또는 국유건물에 부착된 철탑, 울타리 등 시설물

2) 입목죽: 국유지상에 식재된 나무 또는 대나무

3) 무체재산: 지상권,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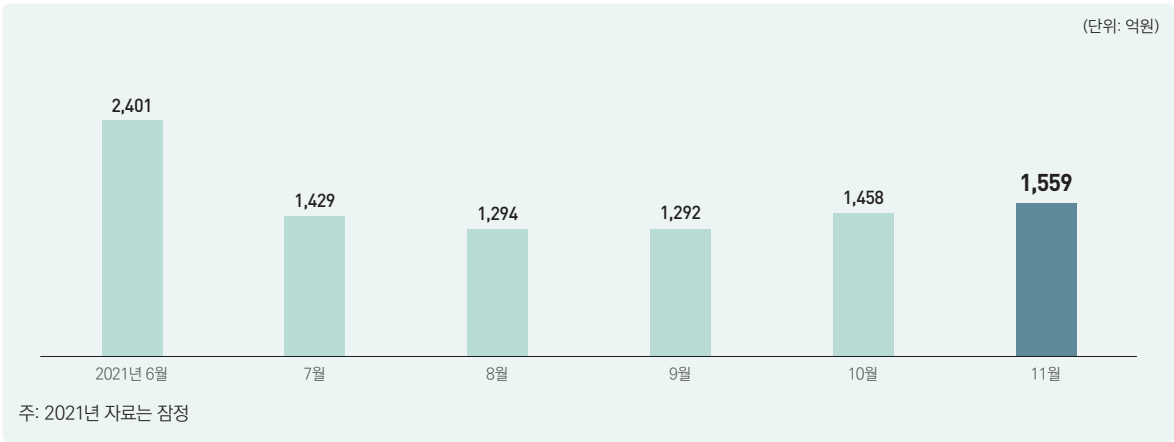
국 유 재 산 수 입

• 2021년 11월 말 기준

국유재산 수입
1,559
억원

전월 대비
+101억원

전년 동기 대비
+285억원



매각대
1,299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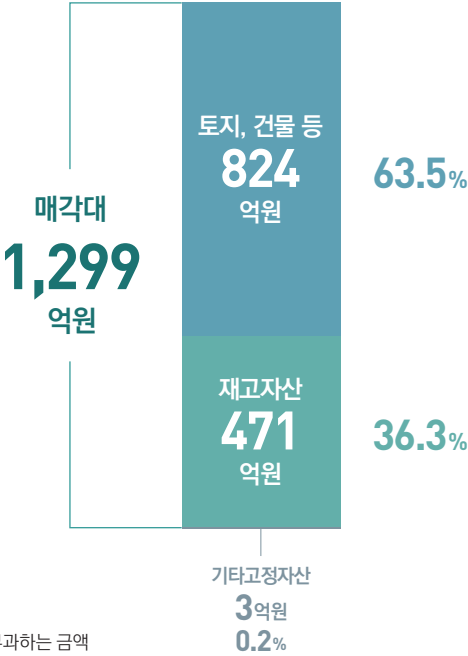
- 전월 대비 **-33**억원
- 전년 동기 대비 **+156**억원
- 국유재산 수입 비중 **83.3%**

변상금
46
억원

- 전월 대비 **+25**억원
- 전년 동기 대비 **-9**억원
- 국유재산 수입 비중 **3.0%**

대여료
213
억원

- 전월 대비 **+108**억원
- 전년 동기 대비 **+137**억원
- 국유재산 수입 비중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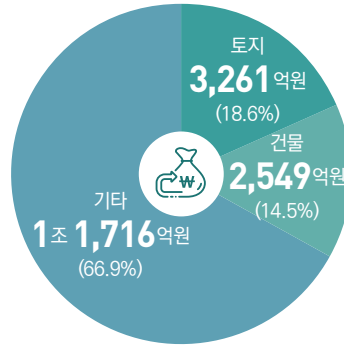


주 1) 매각대: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수납한 대금
2) 변상금: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국유재산 취득·처분

• 2021년 1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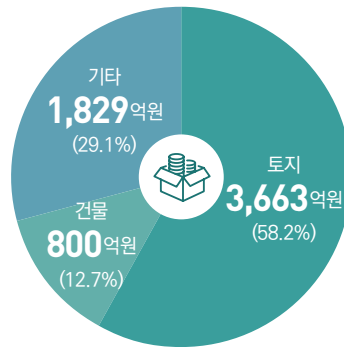
국유재산 취득
1조 7,527
억원



(단위: 억원)

	매매(%)	교환(%)	기타(%)
합계	5,871(100.0)	22(100.0)	11,634(100.0)
토지	674(11.5)	22(100.0)	2,566(22.0)
건물	1,167(19.9)	0(0.0)	1,382(11.9)
기타	4,030(68.6)	0(0.0)	7,686(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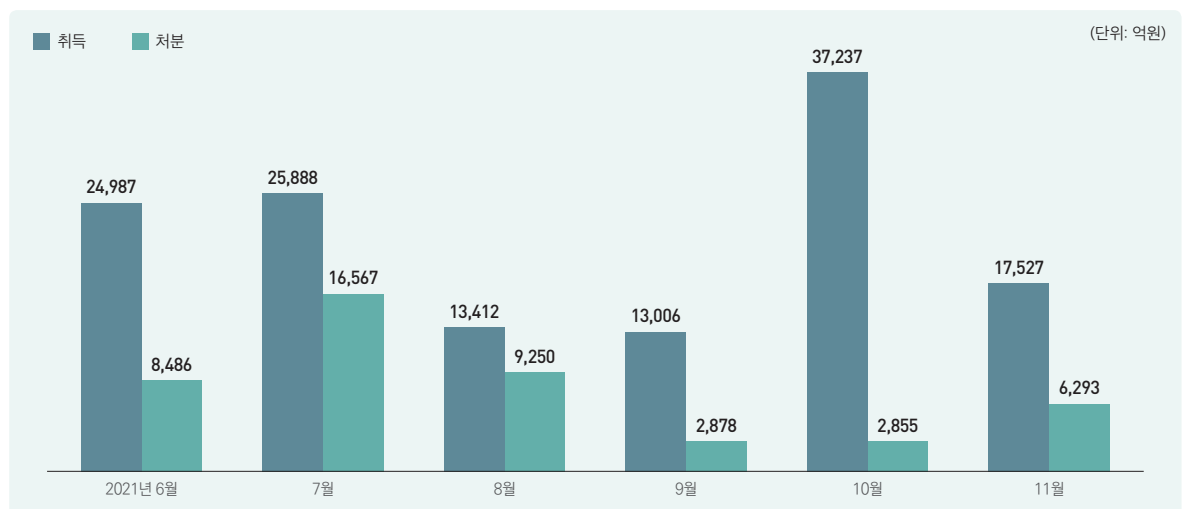
국유재산 처분
6,293
억원



(단위: 억원)

	매매(%)	교환(%)	기타(%)
합계	2,325(100.0)	19(100.0)	3,949(100.0)
토지	589(25.3)	19(100.0)	3,055(77.4)
건물	14(0.6)	0(0.0)	786(19.9)
기타	1,722(74.1)	0(0.0)	108(2.7)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이달의 이슈키워드

골목상권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골목상권'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1월 23일 정부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12.7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관 키워드로는 '소상공인', '시장', '지원' 등이 도출됐다. 이번 「나라재정」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재정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연관어

소상공인

시장

지원

예산

절감

카카오페이

활성화

경제

지역경제

매출

정책

정부

도시

경쟁력

코로나19 4차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행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등의 피해가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고용취약계층 지원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 △돌봄과 방역지원 등의 분야에 약 12.7조원 규모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지원에 나섰다.

첫째, 손실보상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230만명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3분기 손실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소상공인들도 금융지원, 비용부담 경감, 매출회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에 대응하고, 고용취약계층 등 약 40만명을 위해 △구직급여 △직업훈련 △건강진단·산재예방 △청년금융 등의 지원을 위해 1.4조원을 확대한다. 이 중 1.3조원을 구직급여 확대에 투입하여 19만 6,000명의 구직급여를 확보하고, 수급자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더 많은 실업자, 재직자 등이 직업훈련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48만명에서 54.5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및 안전확보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 기술 지도도 추가로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청년의 금융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Youth) 공급을 약 600억 확대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셋째, 정부는 물가 상승세로 인한 서민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 및 저소득층·도서지역 연료비 지원 등을 위해 4,00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사료구매 및 식품 원료매입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친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및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지원도 추가로 반영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주요 내용	지원 금액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1.4조원 ·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 9.4조원	10.8조원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	· 구직급여: 1.3조원 · 직업훈련: 841억원 · 건강·산재예방: 23억원 · 청년 금융 지원: 90억원	1.4조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지원	· 농가·식품업체 자금 지원: 3,800억원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79억원 · 도서지역 연료비: 253억원	0.4조원
돌봄·방역 지원	· 돌봄 지원: 936억원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196억원	0.1조원
합계		12.7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1).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2021.11.23. 발표자료)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돌봄 및 방역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은 5,000명이 증가한 12.5만명, 근로시간 단축은 만명이 증가한 1.8만명의 국민이 수혜를 누린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국 258개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인력 인건비 지원 연장을 통해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정부는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경제정상화를 이루는 정책적 지원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사업 또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골목상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정부는 2022년에도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지원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지역상권의 재도약 지원 등 관련 재정사업을 진행 중이다.

골목상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억원)

관련 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	-	-	24,263	22,435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	-	101	220	770
시장경영혁신 지원	2,149	2,742	5,833	3,625	4,302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사업예산 시계열」, 재구성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2조 2,435억원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방역조치로 인해 심각한 경영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이익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1년 3분기에 발생한 손실보상과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다. 지원되는 손실 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되는데, 정부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산식¹에 따라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의 지급방식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으로 나뉜다.

첫째, 신속보상은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진행된다. 신속보상의 보상금은 당일~2일 이내로 지급된다.

둘째, 확인보상은 보상금 신청 후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손실보상시스템이나 시·군·구청에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심의를 진행하여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확인보상에서 제외, 재산정 보상금 비동의, 방역위반 사실 정정, 보상금 환수 통지 등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동일하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 또는 환수절차를 진행한다.

●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년 대비 550억원을 증액한 770억원을 편성하여, 전국 약 5,000여 개의 소상공인 상점에 스마트 오더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용하기 적합한 스마트 기술 및 스마트오더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마트 기술 지원은 서빙로봇, 메뉴보드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스마트오더 지원은 모바일에 약·주문·결제 등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크게 전국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권별 스마트 상가 조성, 업종별 소상공인 협·단체를 지원하는 업종별 스마트 상점조성 등으로 나뉜다. 지원 금액은 지원유형에 상관없이 스마트기술은 455만원, 스마트오더는 35만원을 지원한다.

● 시장경영혁신 지원

시장경영혁신 지원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1년 대비 677억원 증액된 4,302억원이 편성되었다. 편성액은 마케팅 지원, 상권활성화,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는데 투자된다.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 시장 육성, 청년상인 육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바우처 지원, 전통시장홍보,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서도 기존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의 상권의 환경개선, 테마 공간 조성 등 상권의 자생력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핵심 상권에 쇼핑, 지역민 편의시설, 육아 등이 복합된 청년몰을 구축한다.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유망 청년상인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가 진단 및 지도, 시작품 제작, 가업승계 등의 지원으로 해당 청년 사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1. 2021년 3분기 기준 '손실보상금=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계산되는데, 보정률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80%이다.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전망 「2021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은 매년 4월, 7월, 9월, 12월에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을 발표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1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의 주요 내용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2021년과 2022년 경제전망을 소개한다. ADB는 한국을 포함한 총 5개국의 동아시아 국가와 남아시아 8개국, 동남아시아 11개국, 중앙아시아 8개국, 태평양 지역 14개국 총 46개국의 경제전망을 분석했다.

김연민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kym21@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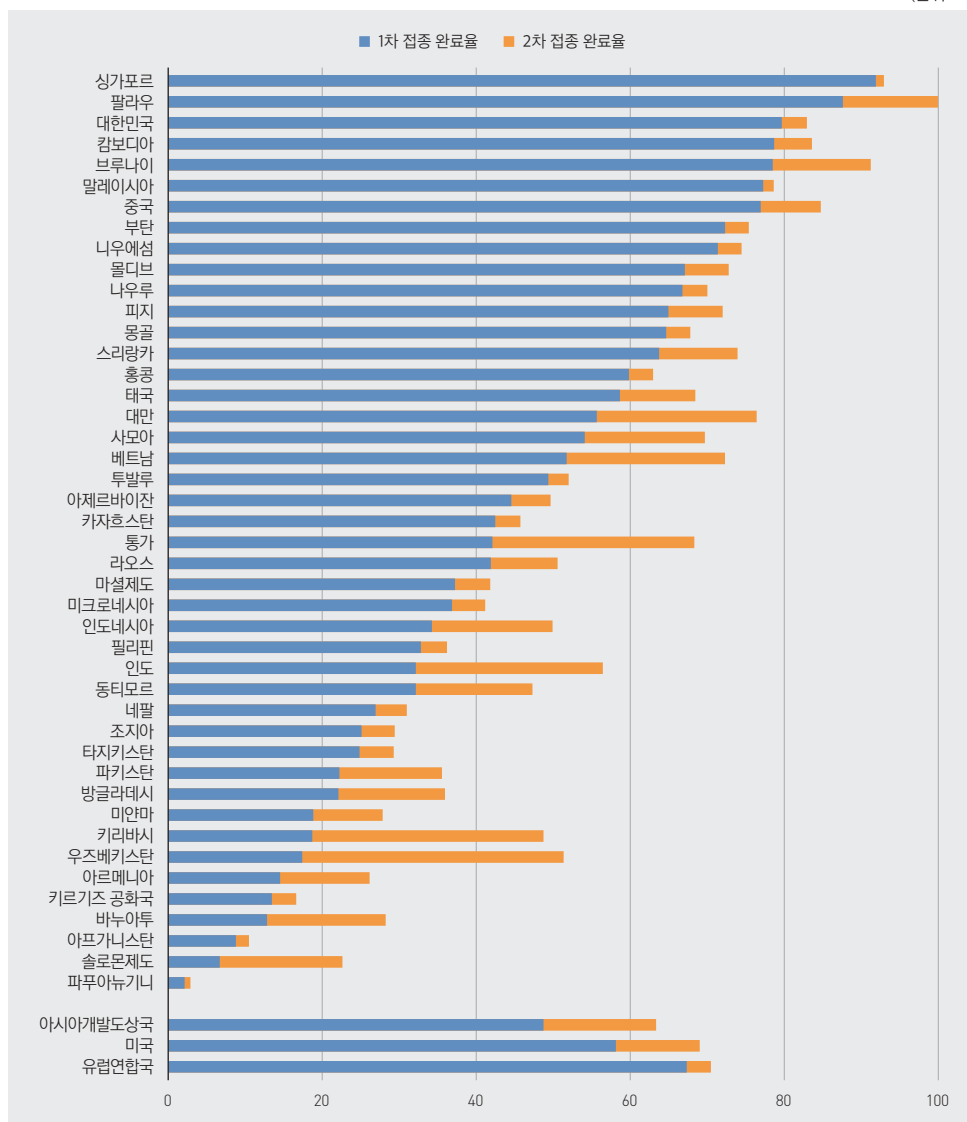


1.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12월 14일에 발간한 「2021 아시아 경제 보충 전망」(2021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에서 2021년과 2022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7.0%, 5.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전망치 7.1%, 5.4%와 비교했을 때 각각 0.1%p 하향 조정된 결과이다.

〈그림 1〉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단위: %)



주: 2021년 11월 30일 기준

자료: ADB. (2021). 「2021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p.2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 때문이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일 평균 신규 확진 사례가 5만건을 넘었으며, 백신 접종률은 48.7%였다. 8월(28.7%)과 비교하여 백신 접종률은 크게 개선됐으나,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어 비교적 감염에 취약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제 여행의 제약과 서비스 산업 타격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역 활동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공급중단(Supply Disruption) 현상이 지속된 점 때문이다. 당초 2021년부터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출호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았지만, 핵심 부품 부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1%p 하향 조정되었다. 공급중단 현상은 전 세계의 공급배송시간(Supplier Delivery Time)¹ 지연과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었다.



● 아시아 지역별 경제전망

동아시아의 2021년과 2022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7.5%, 5.0%로 지난 9월 발표된 전망치에서 0.1%p씩 하향 조정되었다.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은 2021년 3분기까지 호조세를 보였으나, 2021년 4분기 기저효과로 인해 점차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측하여, 중국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2021년 8.0%, 2022년 5.3%로 전망하였다.

남아시아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8.8%에서 8.6%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인도의 제조업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7.0%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전 세계적 수요증가 추세와 국내 경제 활동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였다.

2021년 동남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1%p 감소한 3.0%로 조정됐다.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이동 제한 정책이 2021년 3분기 경제성장을 둔화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경제 위축이 동남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에 크게 일조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3분기에 경기가 위축되었고 정치적 상황²이 불안정했으며, 베트남은 봉쇄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2021년 9월까지 사상 최저치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은 2021년 3분기 경제실적이 개선되었다. 2022년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0%에서 5.1%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예방접종의 확대, 국내활동의 증가, 무역량 증가 등 경기 재개를 통한 GDP 성장을 가속화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중앙아시아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1%에서 4.7%로 상향조정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회복세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 결과이다.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국가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이 있다. 대체로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 이유는 제조업의 성장과 석유 수출국으로써 고유가 전망에 힘입은 것이다. 중앙아시아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2%에서 4.4%로 상향됐다.

태평양 지역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6%로 지난 9월에 발표한 전망치를 유지했다. 태평양의 주요 경제국인 피지와 파푸아뉴기니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태평양 전체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게 분석된 것이다. 2022년에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로 발표하였다.

¹ 공급배송시간은 경제에서 공급망 지연 정도를 포착하는 지표이다. 지수가 50일 경우, 전월 대비 배송 시간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고, 50을 초과하면 배송 시간이 짧거나 빨라짐, 50 미만일 경우 배송 시간이 길어지거나 느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² 말레이시아 총리 무히딘은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지난 8월 스스로 사임했다.

〈표 1〉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GDP 성장률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전망치	12월 전망치	9월 전망치	12월 전망치
아시아 개발도상국	-0.1	7.1	▼ 7.0	5.4	▼ 5.3
동아시아	1.8	7.6	▼ 7.5	5.1	▼ 5.0
대한민국	-0.9	4.0	4.0	3.1	3.1
중국	2.3	8.1	▼ 8.0	5.5	▼ 5.3
홍콩	-6.1	6.2	▲ 6.4	3.4	3.4
대만	3.1	6.2	6.2	3.0	3.0
남아시아	-5.6	8.8	▼ 8.6	7.0	7.0
인도	-7.3	10.0	▼ 9.7	7.5	7.5
동남아시아	-4.0	3.1	▼ 3.0	5.0	▲ 5.1
인도네시아	-2.1	3.5	3.5	4.8	▲ 5.0
말레이시아	-5.6	4.7	▼ 3.8	6.1	▼ 5.9
필리핀	-9.6	4.5	▲ 5.1	5.5	▲ 6.0
싱가포르	-5.4	6.5	▲ 6.9	4.1	4.1
태국	-6.1	0.8	▲ 1.0	3.9	▲ 4.0
베트남	2.9	3.8	▼ 2.0	6.5	6.5
중앙아시아	-1.9	4.1	▲ 4.7	4.2	▲ 4.4
카자흐스탄	-2.6	3.4	▲ 3.7	3.7	▲ 3.9
태평양 지역	-5.3	-0.6	-0.6	4.8	▼ 4.7

주 1) 기호 ▲, ▼, -는 9월 수정 전망치로부터의 등락을 표기
2) 동아시아(5개국):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대한민국
남아시아(8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남아시아(11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앙아시아(8개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태평양 지역(14개국): 쿡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 공화국,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섬,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자료: ADB. (2021). '2021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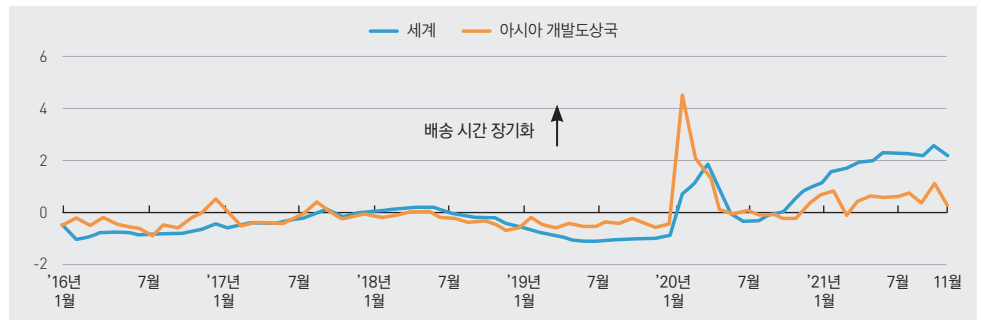
2.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

이번 「2021 아시아 경제 보충 전망」에서는 공급중단 현상과 유가변동의 영향을 반영한 인플레이션을 분석 발표했다. 2020년의 경제적 상황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완화된 점,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상승된 점,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물가상승 요인으로 보았다.

AD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2021년과 2022년의 물가상승률을 각각 2.1%, 2.7%로 전망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았다. 9월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는 2021년에 0.1%p 하향 조정됐는데, 이는 공급배송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ADB는 공급배송시간이 물가상승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덧붙여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Z점수가 세계 Z점수와 비교하여 낮게 분석된 결과를 통해 향후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21년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공급중단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킨 것으로 해석했다.

〈그림 2〉 공급배송시간 Z점수

(단위: Z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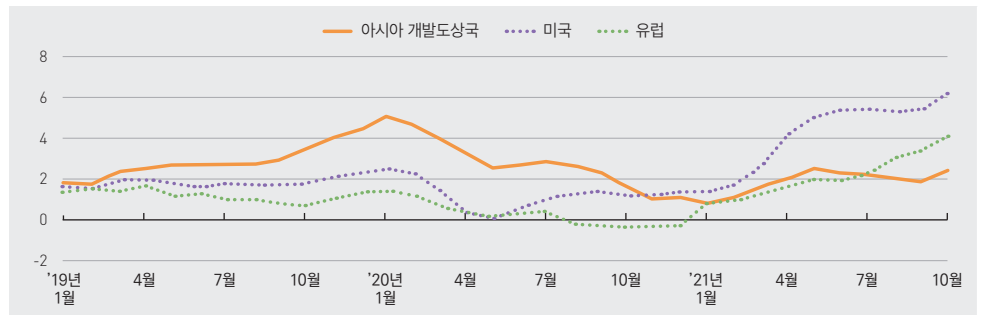


주: 공급배송시간 지수를 역으로 만들어 값이 증가할수록 배송시간 장기화를 의미한다. Z점수는 공급배송시간이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 아시아 개발도상국 Z점수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중국, 대한민국, 태국, 베트남의 가중 평균치이다.

자료: ADB. (2021). 「2021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p.4

〈그림 3〉 인플레이션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자료: ADB. (2021). 「2021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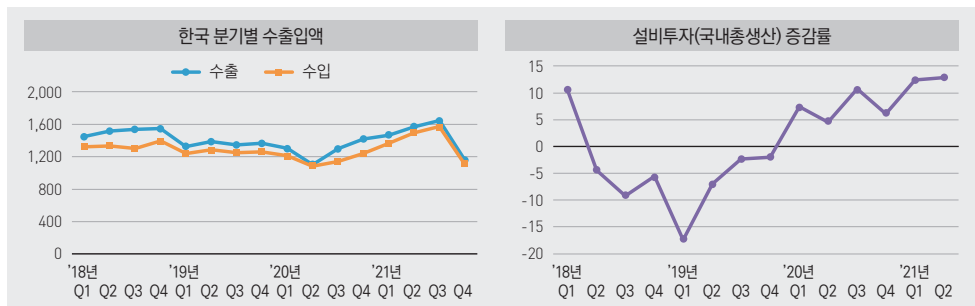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은 공급지연의 영향뿐만 아니라 원유가격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았다. 백신 접종률의 증가 그리고 경제활동의 회복이 원유의 수요를 증가시켜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브렌트유의 가격은 지난 10월 배럴당 평균 84달러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가격 또한 2014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1월, 오미크론 변종이 확산되자 석유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유가 상승세는 반전되었다. 11월 셋째 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12월 첫째 주에는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가격이 더 떨어졌다. 이러한 석유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유의 수요 지수와 선물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중 평균 배럴당 71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미국원유 생산량이 회복되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유가가 최근 최고치 보다 하락해 연중 평균 7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유가 상승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원유의 대체재인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예측했다.

3. 한국의 경제전망

ADB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4.0%, 2022년 3.1%로, 지난 4월에 발표한 2021년 전망치 3.5%에서 0.5%p 상향됐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 호조세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국은 지난 7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잠시 둔화됐으나, 지난 9개월 동안 가계 소비가 2.7% 성장하고 정부 지출이 4.6% 증가하는 등 내수가 증가하였다. 민간투자는 같은 기간 5.1%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기술(IT) 부문이 성장하여 민간투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국내 경기 회복과 함께 수입액이 11.4%, 전체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11.0% 증가했다. 11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이 70%를 돌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완화되어 4분기 가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4〉 한국 분기별 수출입액 및 설비투자 동향

(단위: 억불/ 전년 동기 대비, %)



주: 원 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자료를 편집자가 추가 보완함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stat.kita.net/>), 한국은행(<https://ecos.bok.or.kr/>)

ADB가 전망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에 비해 각각 0.3%p 상향 조정되어 2021년 2.3%, 2022년 1.9%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매월 2.0%를 넘어서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2021년 1~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2%를 기록했다. 석유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2021년 한국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0.6	1.1	1.5	2.3	2.6	2.4	2.6	2.6	2.5	3.2	3.7
농축수산물	10.0	16.2	13.7	13.1	12.1	10.4	9.6	7.8	3.7	0.2	7.6
공업제품	-0.6	-0.7	0.7	2.3	3.1	2.7	2.8	3.2	3.4	4.3	5.5
집세	0.7	0.9	1.0	1.2	1.3	1.4	1.4	1.6	1.7	1.8	1.9
공공서비스	-2.1	-2.1	-2.0	-1.0	-0.7	-0.6	-0.5	-0.7	0.1	5.4	0.6
개인서비스	1.5	1.6	1.8	2.2	2.5	2.5	2.7	2.7	2.7	2.7	3.0
근원물가	0.9	0.8	1.0	1.4	1.5	1.5	1.7	1.8	1.9	2.8	2.3
생활물가	0.3	1.2	1.5	2.8	3.3	3.0	3.4	3.4	3.1	4.6	5.2

주: 원 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자료를 편집자가 추가·보완함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

4. 위험요인

ADB는 주로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영향,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공급지연 현상이 경제전망에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오미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경제활동에 다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 여행에 대한 규제가 관광 의존적인 국가의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서둘러 실시되고 금융 변동성이 확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급지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무역 제약이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육성과 과학기술을 통한 인류의 진일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사업과 예산을 알아본다.

글. 정재림

Interview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장일해 사무관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및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하고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인력양성 등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우주 기술과 원자력 기술, 디지털 뉴딜을 함께 선도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ICT 혁신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만든다’는 비전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2개의 차관실과 1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관실에는 부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과 기초·원천 연구개발, 우주·원자력, 연구성과사업화 등을 담당하는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미래인재정책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관실에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사업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실과 5G/6G 통신, 미디어·방송 등을 관할하는 네트워크정책실, 전파업무를 담당하는 전파정책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정부 전체 R&D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R&D 예산심의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 재정팀 장일해 사무관의 설명이다.

“그 안에서, 제가 속한 기획조정실 재정팀은 과기정통부의 예산 및 기금의 편성과 집행,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종합 조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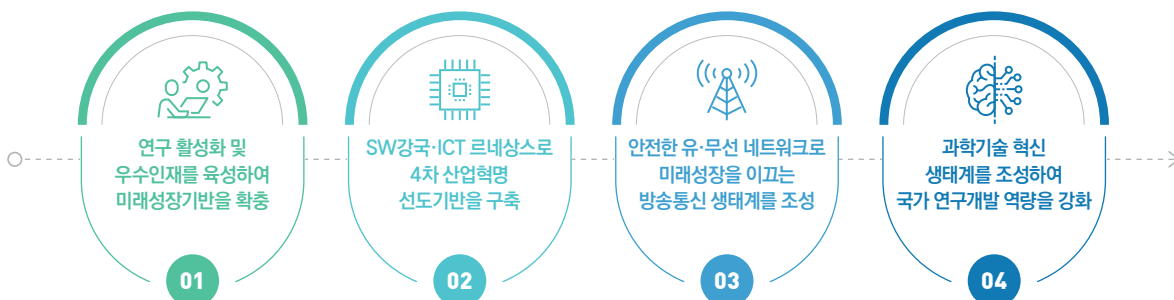
장일해 사무관은 과기정통부를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예산 사업

그렇다면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를 맞이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2022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 사업에 대해 물었다.

“과기정통부의 2022년도 예산은 지난해 12월에 국회 심사를 마치고 총 18.6조원(2021년 대비 1.1조 원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포용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5개의 중점 분야에 투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목표



5가지 중점 분야는 ① 기초·원천·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 ② 디지털뉴딜, ③ 3대 신산업, ④ 미래 인재양성, ⑤ 포용사회 실현이다.

먼저, 기초·원천·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에는 7.56조원을 투자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예산(교육부 포함)은 2017년 1.26조원에서 2배 이상 확대된 2.55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에 발사된 누리호 후속을 준비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에는 1,728억원을,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는 32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우주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백신개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허브 기반 구축에 193억원을,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등 백신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268억원을 투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185대 핵심품목 자립화와 65대 미래선도품목 선제 확보도 추진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첨단 양자기술의 조기 확보와 핵융합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향상하는 핵심기술 개발에도 345억원을 편성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뉴딜 2.0에 2.73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댐 등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지원한다. 데이터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5,797억원을 투입하여 헬스케어, 농축수산 등의 분야 310종을 구축·개방(www.aihub.or.kr)할 예정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와 AI 융합 서비스 발굴·확산 및 6G 핵심기술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

다. 아울러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미디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VR·AR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887억원을 편성했다. OTT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도 48억원을 편성한다. 디지털 안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 634억원,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에도 43억원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3대 신산업 육성에는 0.58조원을 투자한다. 국가신약개발, 재생의료기술개발, 의료기기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0.42조원을 편성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0.12조원, 자율주행차 및 드론 등 무인이동체 개발에 약 0.04조원을 지원한다.

네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에 0.74조원을 투자한다. 우주, 양자 등 미래유망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 사업에 413억원을 편성했으며, 청년·신진연구자와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기업이 원하는 정보통신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주도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고급 인재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SW·인공지능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사회 실현에 0.8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에 150억원을, 탄소포집·활용을 위한 CCU3050 사업에 90억원을,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 사업

에 75억원 등을 신규로 투자한다. 동북아 지역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113억원을 투입하고, 치안현장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에도 54억원을 지원한다. 급속한 디지털 사회 진입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디지털배움터 전국 1,000개소를 운영하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에 27억원을 편성하여 디지털격차 해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6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1만개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통신접근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경감에도 기여한다. 또한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역 연구개발 혁신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포용성장 실현을 위한 노력

총 예산 18.6조원을 투자하는 만큼 목표로 삼은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가속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2022년도 예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로 인한 연구 성과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운영되는데 잘 쓰여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설 기업과 전문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우수한 성과들이 창출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일해 사무관은 과기정통부가 조금은 멀게 보일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지만, 그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또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가까운 미래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년도에는 저도 제 소임을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여 우리나라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들과 함께 조금 더 편안한 한 해를 보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나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을 기대해본다.



“과기정통부가 조금은 멀게 보일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지만, 그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또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가까운 미래입니다.”



‘어떻게’, ‘왜’ 다른가?

글.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며

마침 대선의 계절이다 보니 나라살림과 관련된 공약이나 구호들이 연일 쏟아져 나온다. 한편에서는 ‘보편복지’를 내세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선별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편에서는 세금의 추가 징수를 통한 ‘재정확대’를,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 나라 안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 같은 우리네 살림살이 문제를 놓고 왜 이토록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까? 이 글은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지 그 이유를 구명해 보는 자리로 마

련되었다. 먼저 이번 호에서는 재정의 개념과 성격을 다시금 돌아보고,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서로 다른 주장들이 이처럼 대척적(對蹠的)으로 또는 다양하게 제시되는지 그 연유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¹.

2. 재정의 개념과 성격

재정²은 흔히 ‘국가(정부)의 경제행위’라 정의된다. 쉽게 풀어 보면 나라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의 살림살이도 그러하지만 정부의 살림살이는 반드시 어디에 얼마를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꾸려가게 되어 있다. 이때 살림살이의 총괄적 계획표를 ‘예산’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산’의 관점에서 재정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의결하고 집행, 결산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산과정의 측면에서 재정활동을 다루는 경우에는 예산과정과 관련된 절차적 내지 제도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한편 국민들의 ‘경제생활(살림살이)’과 관련하여 재정을 다루는 경우에는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정부의 경제행위’라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공공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획득·관리·처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원래 경제활동이라 하면 우리 인간의 의식주 생활을 비롯한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적 수단을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진 민간의 생산활동 성과의 일부를 조세 등의 형태로 징수하여 그것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민간의 경제활동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부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민간인들의 경제활동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덜 바람직한 경우 그것을 더 바람직하게 해주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이 갖는 이와 같은 성격까지를 포함해 보면, 결국 재정이란 ‘정부의 경제행위로서 민간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 다시 정의할 수 있다. 그것도 ‘좋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정은 단순히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는 ‘사실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당위적인 ‘정책적 개념’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인식의 차별성과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위와 같이 재정의 개념과 성격을 파악하고 보면, 이제 도대체 민간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좋은 경제활동’이라고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제활동이 좋은 경제활동인지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인다는 데 있다. 이렇게 좋은 경제현상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면 현실의 경제 상태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고, 결국 더 좋은 경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채택하고자 하는 재정 수단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본고는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좋은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바로 재정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크게 사회문제 설명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견해와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하는 견해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재정활동과 그 성과를 바라보는 인식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보이고자 한다.³

1 다음 호로 이어지는 글들에서는 본고의 맥락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을 차례대로 다룰 예정이며, 마지막 호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인식)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 재정은 경우에 따라 ‘재정활동’, ‘재정행위’, 또는 ‘재정현상’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재정활동’, ‘재정행위’라 부르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의 의지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비해, ‘재정현상’은 존재하는 현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재정’은 이들을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 용어라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장 맥락에 따라 이를 혼용하고 있으나 혼동 없기를 바란다.

3 물론 논자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 여기서는 사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재정현상과 그 성과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보이는데 뜻을 두고, 본문에서와 같이 개관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사회과학 방법론(인식론) 관련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개인을 중시하는 견해

‘좋은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무엇보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서 기인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질(창조성)은 어떤 조건(상황) 속에서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인식을 일컫는다. 먼저 사회문제 설명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추구해낼 수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독자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것을 극대화해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때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Homoeconomicus)로 인식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원자론적 인간관’ 내지 ‘개인주의적 인간관’이라 부른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형성된 인식이 아니라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견해와 더불어 형성된 것이다. 개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개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파악하여,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문제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사회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부문과 정치, 행정, 문화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비경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경제부문은 ‘시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시장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균질적인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그때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과 사회와 시장을 이렇게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정부)’는 가능한 개개인들의 합리적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바람직

한 것으로 인식한다. 아울러 현실적 필요에 따라 정부가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개개인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들 사이에 형성된 제반 경제적 관계를 중립적으로 조절해 주는 역할, 즉 시장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 입장을 취한다. 결국 이러한 인식을 갖는 사람들은 ‘재정활동과 그 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세금은 적게 걷으면서 조세징수와 지출활동이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보강하는데 치중할 때,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고되어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한편 앞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개별적 합리성을 수용하되, 그 합리성 추구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을 중시하는 견해가 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그러한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논자들은 개인들의 집합이 그 자체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그 자체가 갖는 독자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할 때 흔히 일컫는 ‘구성의 모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견해인바, 개인들의 합리성의 추구가 사회적 합리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완전한 상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논자들은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문제는 개인과 더불어 사회 자체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들도 사회는 경제와 비경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 견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구성원들의 합리성 추구란 불완전하기 마련이므로 경제부문을 대변하는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 결과가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좋은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바로 재정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불러온다.



이 입장에서는 ‘국가’를 중립적 기구로 파악하면서도, 개인들의 불완전한 사익을 계획적으로 잘 관리하여 전체적으로 시장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될 때 개인들의 경제활동의 결과가 보다 바람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결국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논자들은 ‘재정정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의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 성과를 수정하는 기능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2)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하는 견해

앞의 논자들과는 달리 인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자질(창조성)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논자들이 있다. 이렇게 인간의 관계적 본성을 중시하는 견해도 구체적으로는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크게 ‘소유관계’를 중시하는 견해와 ‘제도와 인간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견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소유관계’를 중시하는 논자들은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생산과정에서 맺어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관을 흔히 ‘사회적 인간관’이라 부른다. 여기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구체적으로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일컫는데, 전자가 자본가 집단, 후자가 노동자 집단에 해당된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하여 ‘소유관계’ 또는 생산과정에서 맺어진 관계라 하여 ‘생산관계’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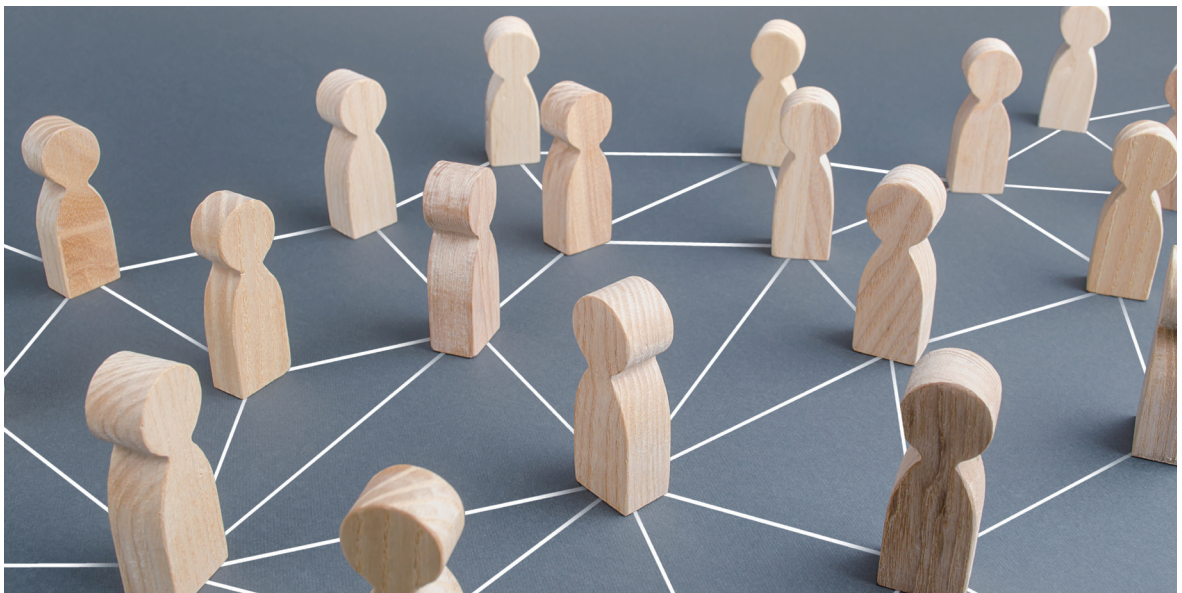
이러한 인간관은 ‘사회’에 대한 견해로 이어져, 이들은 사회를 하나의 구조물(Structure)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한 하부구조와 그 위에 형성된 정치, 법, 의식 등 상부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구조물로서 사회는 생산관계에 의해서 그 경제적 기초가 구축되며, 그러한 경제적 기초에 의해서 상부구조가 정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조물로서 사

회가 형성되고 변화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도 사회를 경제와 비경제 부문으로 구분해서 본다는 점에서는 앞의 논자들과 궤를 같이 하나, 이들은 이 두 부문이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경제부문에 의해서 비경제부문이 결정된다는 소위 '경제결정론적(유물론)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논자들과 견해를 달리한다. 이들도 경제부문은 '시장'으로 파악하지만, 앞의 논자들과는 달리 시장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균질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간 거래의 장이 아니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이질적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장 작동의 결과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파괴적·갈등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당위적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조화로운 관계 생성을 통해 그들의 창조성 발휘에 기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특정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유관계 내지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는지를 파악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이들은 '재정활동과 그 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기존의 소유관계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계층들 중 어느 계층에게서 얼마나 세금을 걷어서 어느 계층에 얼마나 많은 편익을 주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는 입장을 보이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잠재적 자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생산적 본성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산 성과를 착취하고자 하는 비생산적 본성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는 '다차원적인 존재'라고 파악하는 논자들이 있다. 이들은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정짓는 여러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따라 그와 같은 다차원적 본성 중에서 어느 본성이 현실에서 구체화되는지가 달라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정짓는 제도들이 그들의 생활 과정에 베여있는 전통이나 문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얼마나 생산적 본성을 발휘하는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제도에 따라 생산적 계층과 비생산적 계층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변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의 인간관을 ‘다차원적 인간관’ 내지 ‘사회문화적 인간관’이라 부른다.

이러한 인간관은 ‘사회’에 대한 견해에도 반영되어, 이들은 사회를 살아있으면서 변해가는 하나의 유기체(Organism)로 인식한다. 이들도 사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경제와 비경제 부문의 존재를 전제하기는 하지만, 앞의 견해들과 달리 사회를 경제와 비경제 부문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두 부문은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한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제부문을 대변하는 ‘시장’도 사회의 여러 제도들 중의 하나로서, 그것이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물질적 생활관습이나 문화를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시장의 작동이 구성원들의 생산적 본성을 활성화시켜 물질적 삶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비생산적 동기를 부추김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문제 해결 과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 구성 요소인 인간과 사회와 시장을 이와 같이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당위적으로는 해당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이 제도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해당 사회의 기존의 제도를 만들어 낸 기득세력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이들은 ‘재정활동과 그 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세금이나 지출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그 사회의 제 계층들의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인) 경제적 동기에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지,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 과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입장을 보인다.

4. 나오며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재정활동과 그 성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서로 다른 견해들의 이면에는 인간을 비롯하여 사회, 시장, 국가(정부)를 바라보는 각자의 서로 다른 인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⁴.

독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인식이 어느 견해에 닿아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무릇 재정을 비롯한 사회현상을 다루는 연구자나 관료라면 자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자신의 인식체계를 늘 점검하고 다듬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 견해 가운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어느 견해가 현 단계의 우리 사회 시민들의 삶을 해명하는데 더 적절한지를 찾아 실체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그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우리 모두 ‘더불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찾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⁴ 인간, 사회, 시장, 국가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서로 다른 재정이론을 낳게 하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서로는 우명동, (2005), 『국가론: 재정이론 차별성의 근원』, 해남 참고.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 재정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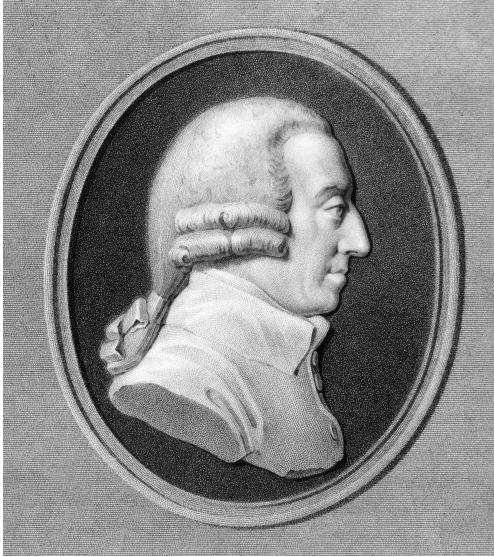
글. 김익섭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재정정책학회 명예회장

Adam Smith

애덤 스미스 1723~1790

The Wealth of Nations





Adam Smith

학자의 삶

경제학을 고전파 정치경제학과 사회과학의 독립된 분야로 창립시킨 것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년)였다. 스미스는 1723년 스코틀랜드 커폴디(Kirkcaldy) 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지역 대학을 다니기 위해 글래스고로 옮겨 왔다가 1740년 옥스퍼드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공부했다. 그러나 그 당시 옥스퍼드의 권위주의적이고 관습적인 학풍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그의 고향 커폴디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는 2년 동안 철학과 문학을 주제로 글을 저술하며 연구 활동을 하다가 에든버러에서 수사학과 영문학을 강의했고 그의 강의는 많은 청강생들을 불러모으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그 이후 1751년에 스미스는 그의 스승이었던 프란시스 허치슨의 후계자로 글래스고대학교에서 논리학과 도덕철학 교수로 재직하게 됐고 그

대학에서 신학, 윤리학, 정치경제학 등을 강의했다. 그 당시 영국 대학 교과과정은 신학, 윤리학, 정치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제학은 독립된 학문 분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도덕철학을 강의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동정심과 윤리학에 기초하여 사회심리학적 시각으로 연구한 저서 『도덕감성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1759년에 출간했다.

그의 저서 『도덕감성론』은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그 책을 읽었던 많은 독자들 가운데 젊은 귀족인 버클룩 공작(Duke of Buccleuch)은 스미스를 개인 교사로 초빙했다. 스미스는 글래스고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젊은 공작과 함께 1764년부터 1766년까지 유럽을 여행했으며, 여행 중에 파리에서 1년 동안 머물렀다. 그 당시 유럽의 지적 사상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스미스는 위대한 사상가들인 볼테르, 케네, 튀르고 등을 만났다. 이 시기에 만났던 프랑수와 케네를 중심으로 한 중농학과 사상과 철학은 훗날 스미스의 정치경제학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그의 고향 커폴디로 돌아온 스미스는 어머니 농장에서 지내면서 그의 위대한 명저인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집필했다. 1776년 출간된 그의 저서에서 스미스는 중농학과 등의 경제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은 이기적이며 사회에 자연법적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사회적 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경제학을 사회과학으로 독립시킨 불후의 고전 『국부론』이 출간된 지 2년 후에 스미스는 1778년 스코틀랜드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스미스는 관세청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에든버러로 이사했고 1790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경제사상과 국부론

스미스가 학자의 삶을 살았던 18세기 후반 영국과 유럽은 중상주의와 왕권정치가 강화되는 사회정치적 상황이었다. 유럽 국가는 중상주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회이었고 상업과 무역 증진, 금 보유 확대 등을 위한 국가 적극적 개입과 보호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스미스의 경제사상은 혁명적이었고 ‘이단의 경제학(Heterodox Economics)’이었으며 영국과 유럽 국가에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제안했다.

『국부론』은 스미스의 경제사상, 경제이론, 재정학 등에 대해 서술한 위대한 명저로 그의 저서가 출간된 이후부터 경제학이 사회과학에서 독립된 학문이 됐고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국가 부의 원천은 중상주의 사상이 주장했던 상업과 금 보유 증진에 있지 않고, 노동의 분업을 통한 생산력의 증진과 자본축적 확대 및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의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서에서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분업, 자유무역, 시장교환과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스미스의 경제사상은 18세기 후반 중상주의가 주장했던 정부 개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고, 제도의 설계였으며 영국과 유럽에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적 비전이었다.

그는 『국부론』에서 경제인은 이기적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고 보았고, 사회에 자연법적 질서인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 사회적 선으로 이어지며 국가 부를 증진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경제사상과 철학에 입각하여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비개입주의를 주장했다. 스미스는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중상주의 시대에 국가 개입의 최소화와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한 혁명적 사상가였고 이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형성하게 하는 사상적·철학적 기초가 됐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사상은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인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과 신고전파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과 아서 세실 피구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 자유 무역주의 사상은 『국부론』이 출간되고 200년의 역사적 시간이 지난 뒤 1970년대 후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주의로 다시 부활했다. 시장 기능을 강조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던 1970년대 후반 스미스의 경제사상은 미국과 영국에서 다시 부활했던 것이다. 또한 스미스의 자유무역 사상은 21세기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에서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 증진이 전 세계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이론을 입증하는 기초가 됐다.

재정사상과 국가의 역할

스미스는 『재정학』이라는 제목으로 저서를 출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국가 재정의 본질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신의 저서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 재정 활동에 대한 창의적 철학과 다양한 재정사상을 서술했다. 스미스는 『국부론』 5편에서 자유방임주의로 불렸던 국가론, 정부의 최소한 역할론, 조세 제도, 능력설·이익설의 조세원칙론, 조세 부과와 원천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서술을 했다. 그는 경제학의 창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시의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 앞에 있는 애덤 스미스 기념비

시사이었고 동시에 재정학을 고전파 경제이론의 틀 가운데 설명한 최초의 재정학자였다. 이러한 스미스의 재정사상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형성됐던 고전파와 신고전파의 재정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이후 20세기 케인스 학파 재정사상으로 이어져 오늘날 현대 재정학 정립의 근원이 됐다.

스미스 국가론은 '자유방임주의'와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을 강조한 '야경국가론'으로 불려왔다. 그의 재정사상에 의하면 자본주의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며, 국가는 기본적인 최소한 역할인 국방, 치안, 사법과 같은 기능만을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근본적으로 자유방임주의 재정사상을 지니고 있

었지만 『국부론』 5편 1장에서 국가의 제한적 역할에 대해 서술했다. 그는 국가의 몇 가지 최소한의 역할로 국방, 사법, 공공사업(도로, 교량, 운하, 항구), 청년 교육, 종교기관을 들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적절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의 이기적 행위에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으로 국가가 재정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 재정의 몇 가지 역할 가운데, 첫 번째는 다른 국가의 침입이나 약탈로부터 사회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국방이었다. 두 번째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 행위로부터 개인의 재산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법(치안)이었다. 세 번째는 개인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사업 수행과 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청년

교육 증진과 종교기관 지원에 관련된 제도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스미스의 야경국가적 역할론은 그의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경제사상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미스 재정사상은 국가재정의 몇 가지 역할이 왜 시장 기능에 의해 제공되지 않고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지 못했다.

조세이론

국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세입은 조세, 세외수입, 국공채,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조세국가가 출현하면서 국가는 재정 활동에 필요한 세입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부과된 조세를 통해서 확보했다. 사적 부문인 기업은 기업활동

에 필요한 수입을 시장에서 이윤을 통해서 확보하지만, 공공부문인 정부는 이윤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수입을 통해서 확보한다. 국가 활동에 필요한 조세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제도인가 하는 주제는 재정학 학문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오랜 역사적 기간 동안 종교, 철학, 정치사상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돼 왔다.

오늘날 재정학에서 공평한 조세제도의 원칙론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능력설과 이익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스미스였다. 그는 조세론에서 자주 소개되는 좋은 조세제도가 지녀야 하는 기준으로 공평성, 확실성, 지불의 편리성, 징세의 경제성과 같은 4개의 공리(Maxim)를 주장했다. 스미스는 『국부론』 5편 2장에서 이러한

스미스의 자유무역 사상은 21세기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에서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 증진이 전 세계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이론을 입증하는 기초가 됐다.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세원칙론으로 모든 국가 활동을 정부 행위를 지원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즉 모든 개인은 각자의 조세 부담 능력에 근거(능력설)하여 조세를 부담하거나, 또는 국가의 보호로부터 개인이 얻는 이익에 따라서(이익설)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가 그의 저서에서 두 가지 조세원칙론으로 ‘능력설’과 ‘이익설’을 밝힌 이후,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유럽의 학자들 간에 어떠한 원칙에 따라 조세를 배분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스미스 『국부론』 이후 19세기 영국 학자들은 능력설을 받아들이며 능력의 측정 기준(그 예로 소득)이 무엇이며, 능력의 크기에 따라 조세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주요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Anglo-Saxon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야경국가론적 최소한의 정부 기능을 신봉하는 재정사상을 지니고 있었고, 정부지출 규모와 독립적으로 조세 규모가 결정되며 사회적 총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의 공평한 배분 문제에 그들의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능력설은 후에 존 스튜어트 밀의 ‘희생설’과 피구의 ‘한계균등희생설’로 진화됐다.

스미스 재정사상의 과제

스미스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창시자였으며 재정사상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다. 고전파

경제학자였던 그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신봉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적인 시장경제가 정부라는 제도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스미스 재정사상은 작은 정부, 최소한의 정부 활동, 작은 정부지출 규모를 주장했다으며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정학은 정부 활동을 통해 세출과 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스미스와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국가 활동의 세출과 세입 가운데 세출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 개입의 이론적 배경, 정부지출 결정 이론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컨대 스미스와 Anglo-Saxon 국가 학자들의 재정사상은 세출이론은 부족한 가운데 국가 활동에 필요한 세입인 조세를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문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18세기와 19세기 스미스와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방임주의 사상과 최소한 정부 역할이라는 재정이론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험했던 1930년대 대불황을 맞이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고전파 경제이론은 정부 재정의 세출과 세입 활동 가운데 국가 재정 세출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부족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이론의 빈약성은 1930년 대불황을 경험하며 케인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지 160년 후 ‘케인스 혁명’이 등장했고, 그 이후 역사적 시간이 흐르며 재정사상은 새롭게 진화돼 왔다.

Financial *Calendar*

2022 01月 January

● 재정

- 2023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1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 경제

- 통계청 2021년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January

01

재정

- 2023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1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1년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재정

- 2021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1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재정

-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재정

-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통계청 2022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August

08

재정

- 20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통계청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September

09

재정

- 2023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기획재정부, 1.6.)

-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2022.1.7.~1.20.),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통계청, 12.31.)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2.5% 상승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비자물가지수	0.7	1.0	1.9	1.5	0.4	0.5	2.5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	2.2	1.6	1.5	1.2	0.9	0.7	1.8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2.4	1.9	1.5	1.2	0.7	0.4	1.4
생활물가지수	-0.2	0.7	2.5	1.6	0.2	0.4	3.2
신선식품지수	2.1	6.5	6.2	3.6	-5.1	9.0	6.2

□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발표(WB, 1.11.)

- 세계은행(WB)은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4.1%(선진국 3.8%, 신흥, 개도국 4.6%)로 2021년 5.5% 대비 $\Delta 1.4\%p$ 하락 할 것으로 전망
- 전년 대비 성장률 전망 하락의 주된 이유로는 지속적인 코로나19 재발, 재정지원 감소,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을 원인으로 지적
- * 공장·항구 폐쇄, 물류 장애(Logistical Obstacle), 반도체 및 해상 컨테이너 부족 등

April

재정

- 2021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재정

- 2023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1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1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1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통계청 2021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October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경제

- 통계청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재정

-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2023년 예산 확정

경제

-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①

한국재정정보원, 지역사무소에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e나라도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한국재정정보원은 11월 30일(대구), 12월 3일(대전), 12월 10일(광주)에서 총 8회에 걸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정보보호본부·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고객지원단이 협력하여 교육 기회가 적은 원거리 보조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총 94명의 공공·민간 보조사업자가 참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개인정보의 이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방법, e나라도움 업무 중 개인정보보호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을 교육받았다. 또한, 이번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1% 이상이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보조사업자도 다수 있었다.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원장은 “앞으로도 보조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e나라도움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②

한국재정정보원, 인도네시아 FMIS 컨설팅 공동수행

한국재정정보원은 인도네시아의 재정정보화시스템(FMIS)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공동수행하고, 그 결과를 12월 21일(화) 행안부 주최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컨설팅 과제 완료보고회」에서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완료보고회에서는 재정원과 KITC의 인도네시아 FMIS 컨설팅을 비롯해 △콜롬비아 반부패 표준 신고 시스템(국민권익위원회) △탄자니아 디지털 재난 안전 플랫폼(대구광역시) △보츠와나 국가 지급결제시스템(금융결제원) 등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4개 과제가 발표됐다. 재정원의 인도네시아 FMIS 컨설팅 사업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지 환경분석 △FMIS 현황분석 △FMIS 미래모델 수립 △이행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인도네시아에 최적화된 재정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했다. 재정원은 이번 사업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대상국을 추가로 발굴하고, dBrain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정보 공개

세입/세출, 재무제표, 국유재산, 물품, 채권, 결산보고서 등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월간 <나라재정> 정기구독 신청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월간 <나라재정>은 구독 신청 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재정 E-mail을 통해 받아보실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서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E-mail: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며 재정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국부론>이라는 명저로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

•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 응모 기간 2022. 1. 29 ~ 2022. 2. 10.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재정> 사진인증 이벤트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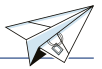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010*****@vmms.nate.com
lee*****@daum.net
ps1*****@gmail.com
ch9**@outlook.com
cho*****@naver.com
woo*****@yahoo.co.kr

사진인증 및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응모 기간 2022. 1. 29 ~ 2022. 2. 10.



독자편지

‘데이터기반 행정으로의 모색’을 읽고 왜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가 뜨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찾기 힘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는 결국 쓸모없는 자원낭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을 많은 정책집행자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h9**

월간 <나라재정>은 개인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ISSN 2508-8971